

서울-양평 고속도·尹 장모 구속... 상임위 곳곳 충돌

국토위, 도로 중점 변경 놓고 "거짓 선동" vs "원희룡 사과" 고성 법사위,尹 대통령 처가 의혹·4대강 보 해체 감사 결과 놓고 공방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감사원의 4대강 보 감사,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법정구속, 우주항공청 설립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는 26일 하루종일 상임위별로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중점 변경' 특별 '의혹'을 두고 초반부터 날카롭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정치공세", "거짓 선동"이라고 비난했고 야당은 사업 백지화 논란을 촉발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선전전도 치열했다. 국민의힘은 '허무맹랑 정치모략 국책사업 골병든다'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노트북에 붙였고, 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라는 문구로 맞붙을 놓았다.

민주당은 현안질의 시작 전부터 국토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질타했다.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는 지난 2주간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지난 일요일 갑자기 자료를 공개했다"며 "자료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기만적인 자료 공개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원 장관의 사과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원 장관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며 "현안질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원 장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경재 의원은 "국토부는 유례없이 지난 7년간의 (고속도로 사업 관련) 모든 자료 55건을 공개했다"고 맞섰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지난달 (특혜 의혹 관련) 첫 보도가 나온 후에 한 달이 지났지만, (이후) 양심선언이나 외압 받은 사람 등이 나온 게 없다"면서 "옛날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가능했지만, 이제 정권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중점 변경에) 관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자료 제출과 장관의 사과를 둘러싼 신경전 끝에 현안질의는 전체회의 시작 후 1시간 반이 지나고 나서야 시작했다.

법사위에서도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의혹',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상시 개방 과정에서 위법이었다는 감사원의 최근 감사 결과를 놓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전일 문재인 정권의 보 해체 결정 당시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편법·위법적 동원됐다는 감사 결과를 고리로 최근의 전국적 수해 상황까지 연결 지으며 야당을 향해 공세를 폈다.

박형수 의원은 최해해 감사위원을 상대로 질의하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태와 관련해 "4대강 사업 중 하나였던 금강지류가 범람한 것인데, 그만큼 치수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 준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4대강의 재자연화가 문재인 정권의 공약이었고 이것이 국정과제였다. 그래서 이미 결정해놓고 이렇게 진행한 것"이라며 "산업부가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서 경제성평가를 조작했다는 것과 똑 닮은 형태"라고도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장모 최 씨의 통장 잔고 위조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관을 상대로 답변을 추가했다.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에게 윤 대통령 장모 의혹에 대해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해보라'고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장모. 공정·정의 국가기관을 관할하는 장관이 왜 이렇게 얽은 미소를 띠고 있나"라고도 비꼬았다.

장관은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반복하기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반복하려는 시도는 재판 내내 전혀 없었다"고 맞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이화영의 '이' 자도 안 물었는데, '최'를 물었는데 '이'를 답한다"면서 언성을 높였

고, "법무장관은 권한과 책임으로 이 자리에서 법사위원들의 질문을 받는 것이다. 감내하라"고 장관직에 임명하는 것"이라며 답변을 압박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직계존속이 구속된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라며 "사실 대통령을 잘못 모셔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 법무부 장관이 국민한테 석고대죄해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의원 질의에 이죽거린다"며 질타했다.

과방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반쪽회의로 진행됐다.

장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잊게까지도 여야 간사 간의 사실정 합의를 노력했지만, 민주당의 제

안은 다음달 17일 (우주항공청) 공청회였다"며 "왜 한 달 뒤에 공청회를 열어야 하나. 긴박한 시기에 휴가를 가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져 우주항공 분야 무한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이 뒤처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8월 내 통과시켜주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은 국민이 주신 소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또 지난 5월 과방위원장 선출 이후 상임위가 두달가량 열리지 못한 것을 언급,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야 '수해 복구·지원 법안' 신속처리 공감대

TF 첫 회의... 31일 2차회의서 처리 법안 논의

여야는 26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각당이 5명씩 참여하는 수해 복구·피해 지원을 위한 TF 1차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다. 다만 국토위 간사들은 이날 현안질의 일정 관계로 불참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회견과 만나 "심도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수해 복구와 항구적인 대책 관련 법안에 성과를 내보자는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또 "(다음 회의인) 31일 모임 때, 상임위별 간사가 수해 대책 법안에 대해 사전에 깊이 논의하고 전체적으로 빠른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합의의 뜻을"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송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앞으로 5+5 협의체가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점에 양당 모두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법안은 각 상임위 간사들이 협의해 제출할 것인데, 31일에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갖고 다시 회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노위는 오늘 중 성과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가 됐다"며 "오늘 오후 한노위 회의에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내일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언급했다.

한노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당은 이날 회의에서 신속한 피해 복구 법안 처리를 거듭 다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이 회의체에서 법안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빨리 통과시켜 수해 복구도 빠르게 하고, 수해를 예방하는 일에 대해서도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도 "재해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원 및 피해 복구가 가능하게 제도·절차 개선, 즉각적인 재정 투입을 위한 예산 책정 등 재난 관리를 위한 전반적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며 "정부도 국가적 재난 사태에 걸맞은 대응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책기관이 日 오염수 연구 결과 비공개"

민주 강훈식 의원 "10년간 영향 분석 설계...한차례 만에 중단"

국책연구기관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을 연구한 보고서를 작성하고서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법제연구원, 환경연구원, 원자력연구원은 202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합동으로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했다.

원전 오염수 유출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민 건강에 미치는 대응 체계 구축, 과학적 역량 강화 정책 강화 방안 등 오염수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 연구였다.

미중 연구는 10년간 매년 10억원씩 들여 총 100억원 규모로 진행하도록 설계됐으나 연구 한 차례 만에 종료됐고, 결과 보고서도 내부에만 보

고하고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해양수산개발원 측은 연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가 예정됐고, 오염수 방출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이 결정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국내외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 의원실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향후 10년간 오염수가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를 설계해놓고, 합리적 이유 없이 연구를 중단한 것은 전형적인 일본 눈치보기"라며 "일본 정부의 입장은 적국 대변하고, 우리 입장에서 분석한 정보는 숨기면서 연구를 더 이상 진행조차 하지 않는 밀실 정부"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통기금, 공시일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문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터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